
문서번호 : 14-03-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성명]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
 조속한 특검으로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전송일자 : 2014. 3. 11. (화)
전송매수 : 2매

[성 명]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

조속한 특검으로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하 “이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행위에 관하여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핵심은 ‘증거위조 논란이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진상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입장 표명의 시기부터 문제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에게만 책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의 공문서위조와 사법기능의 능멸행위에 대한 뒤늦은 입장 표명이야말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입장 표명에서 밝힌 내용도 문제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공식 확인, 검찰의 위조 감정 결과, 국정원 협력자의 자살 시도 및 폭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논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축소하였다. 다음으로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조작된 증거를 옹호해 온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하여 과연 증거조작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된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1. 증거조작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1.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분리 이관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라.

우리 모임은 이 사건의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가 공정한 사법시스템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일이라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다면 우리 모임의 위와 같은 주장을 조속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2014. 3.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주영

